

〈共同研究〉

韓國社會 한 世代

—변화의 동력 12가지—

김 경 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目

次>

I. 서 론

의 성격

II. 접근방법

IV. 12대 동력 선정기준

III. 한국사회 한 세대 ——변동

I. 서 론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총소리 가라앉은 폐허의 먼지를 털고 분연히
다시 일어선 지 한 세대. 이 시기야말로 우리 사회가 겉잡을 수 없는 급격
한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우리 만치 성큼 자라난 성인의 모습으로 세
계사의 협준한 물결을 타개 된 한 세대였다. 지난 30년의 변화는 그 자체의
폭과 깊이와 속도, 나아가 그것이 우리민족의 삶에다 던져 준 충격의 힘과
크기에 있어서 역사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동과도 비길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다가올 미래의 방향과 성격을 좌우하는 데도 크게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볼 때, 지나간 한 세대의 변동을 돌아켜 보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의 관심이 거기에서 끝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추세를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우리가 맞아야 할 미래를 머리 속에 그려 볼 때는 저으기 염려
스러워짐을 금할 길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장차 펼쳐질 사
회의 모습을 그려 보고 거기 담길 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한층 더 바람직
스러운 미래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마땅하다 하
겠다.

2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6卷 第3號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차적인 과제는 우선 지난 한 세대를 점철해 온 사회변동의 주요 动力들을 추적·확인해 보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직한 변화에 유익한 동력들은 더욱 키우고 정교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해한 동력들은 정정, 억제하는 일을 지금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착수하게 된 연구과제는 바로 이와 같은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주제는 지금까지도 여러 관련분야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 온 것이긴 하지만 과문한 탓이겠으나, 여러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주로 변화의 동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보기는 매우 드물다. 물론 현재의 학문발달 단계에서, 짧은 기간에 충분한 자료와 완벽한 이론에 힘입어 빈틈없는 결과를 기대할 만한 것을 내어놓지는 못하지만, 뜻있는 시도임에 틀림없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데 보람이 있을 줄 안다.

II. 접근 방법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는 이론적 작업을 주안으로 삼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이론적 관심을 주된 요소로 생각했더라면, 현재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전개해 온 수많은 사회변동이론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이론틀을 만들어서 비로소 한국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작업은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면 그 대안의 하나는 지난 30 년의 한국사회 변동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종의 서술적 역사기록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실질적인 제약만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도, 우리는 변화의 동력을 찾아 그 구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술적인 자료의 정리만으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론적 접근이라해도 공허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자료가 필요하고 그 서술적 접근이 의미있게 되자면 이론의 인도를 받아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적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우리 의 학계가 현재 갖추고 있는 여건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변동의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국사회의 과거 30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을 아직도 우리가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한 세대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데 필요한 기록의 집성과 정리는 그러면 제대로 해 놓았는가 하면, 그 일도 요원하기만 한 게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란 결국 일종의 探索的 연구라도 시작해 두는 일이라 할 것이다. 탐색적 연구라는 말도 여러가지 뜻을 지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탐색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자료의 소재조차 탐지할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은 조건 아래서 이론적인 틀의 정립이나 방법론의 설계는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접근방법은 일종의 이념형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하겠다.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입수 가능한 수량적 자료들과 연구자들의 질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우선 지난 한 세대의 변동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나열한 다음, 이로부터 좀더 일반성이 높고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변동을 추출해내는 귀납적 절차를 밟아 전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전형화 과정에서는 다시 일반이론의 지침을 받도록 하였다.

한 편, 변화의 동력을 추적,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동력의 개념규정, 선정 기준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일단 합의를 얻은 다음 구체적인 동력 하나씩을 지적 열거하였다. 말하자면, 일반이론의 틀 속에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지목하는 절차를 밟은 뒤에, 나열한 여러 동력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의의를 평가하는 데에는 자료를 검토하는 순서를 따라 작업을 진행시켰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논리적인 기준들에 비추어 동력들 상호간의 관계나 비중, 배열 순위 같은 것에 대한 일반원칙을 토론하여, 개념적 모형을 작성하는 시도까지 해보았다. 그러나, 변동 자체가 이에 복합적인 데다, 그 동력들의 상호 작용의 그물 또한 다원적이고 복잡하므로 도식적 모형의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포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자유로운 공동토의(즉 brain storming)에 의하여 주제의 규정, 문제발견, 이론적 정형화, 자료의 검토, 선정기준 설정, 동력의 선택, 상호관계의 확인, 동력의 기능과 의의 등을 하나씩 차례로 정리하는 절차를 택하였다.

특기할 것은 이번의 공동연구가 이론 바 다학문간 협동연구의 모습을 떠고 인문사회분야뿐 아니라 자연과학도 대표되었다는 점이다. 하기야 더 다

양한 분과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욱 유익했겠지만 연구의 방법으로 보나 실제적 한계로 보아 이 정도의 대표성도 특이하다 하겠다. 흔히 한 주제를 놓고 이론 바다분과 내지 분과간 협동연구를 한다고 할 때 실지로는 각 분야의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보고를 하면 이들을 묶어서 결과를 제시하는 게 관행이다. 엄격히 따져 이런 접근을 다분과 협동 연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의 공동연구는 같은 주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하고 분석하여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다분과 협동연구의 뜻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주로 사회, 경제, 문화지표들이었다. 자료의 경우 밝혀 둘 사항은, 첫째 경제지표 외에는 지표의 종류 자체가 아직 미개발 상태여서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표 또는 자료에 따라서는 1960년대 이후 시기의 것은 입수할 수 있으나 50년대 자료가 아주 없든가 매우 제한된 것이 많았다. 세째로, 자료의 지표화 절차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수량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한계점들이다. 좀 더 질적으로 유효한 자료는 거의 손대지 못하였음은 유감이나, 어렵게도 이런 자료는 집성, 정리해 놓은 것이 전무한 게 우리 학계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4월 중순에 위촉받아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고, 집단토의는 4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수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사이 여러 사람의 학생보조원들이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한국일보사에서는 이 연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자료수집에도 한몫을 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III. 한국사회 한 세대——변동의 성격

우리가 다루는 기간이 한 세대라지만, 1954년을 기점으로 하는 30년을 들이켜 보면 실로 다난했던 시기였다는 느낌이 앞선다. 주요 사건들만 들어도 전쟁의 피해에서 재건하려는 안간힘이 시작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4.19

학생운동이 있었고, 5.16군사 쿠데타에 이어,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중·월남파병, 유신, 석유파동, 그리고 10.26암살 사건, 5.17사태, 제5공화국 출범 등 정말 겉잡을 수 없는 격랑기라고 하겠다. 경제성장의 단계로 본다면, 1953년에서 61년까지를 전쟁복구·경제재건기로, 62~71년의 기간을 자립경제기반구축기로, 그리고 72년부터 78년까지를 산업구조의 고도화추진기로 특징짓기도 한다. 80년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성장을 지향하는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념형적 전형화에 의한 요약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0년의 한국사회 변동을 무엇이라 규정할 것인가를 먼저 토론한 결과, 우리는 두 말로 이를 표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하나는 「產業社會化」요, 다른 하나는 「物質社會化」이다. 물론, 그 사이의 사회변동은 이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모습을 띤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정의하기에 따라, 그와 같은 잡다한 변화들을 포괄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그 기간에 우리가 경험한 변동은 그 이전의 어느 역사 시기에서 겪었던 것에 비해서 가장 산업사회적이고 물질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된 변화라는 점을 표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업사회란 변동의 하부구조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물질사회화란 의식, 가치, 인간 관계 조직원리, 등 말하자면 상부구조의 역동성을 표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사회화〉

일반적으로 산업사회란 공업화가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른다. 공업화란 좁은 뜻에서 무생물적인 동력원(에너지), 즉 석탄, 석유, 전력, 원자력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생산을 확대시키는 기술변동의 과정으로 풀이한다. 이러한 기술변동이 일어나는 데 수반하는 공변현상 또는 결과적 변동을 통털어 사회의 산업화라고도 한다. 우리의 관심은 일반론에 있지 않으므로 한국사회 30년의 변화를 공업화와 관련해서 간추려 본다.

첫째, 일차에너지의 종류를 보면, 1960년대초까지는 나무(신판)와 무연탄이 압도하였다가, 80년대에 이르면 석유와 무연탄이 압도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 발전설비의 용량이 1951년의 약 25만kw에서 82년에는 천만kw로 약 40배 늘었고, 총발전량도 51년의 약 9억 kw에서 82년에는 430억 kw로 약 48배나 껑충 뛰었다. 발전의 동력원으로 수력과 화력의 비율이 51년

표 1. 공업화 추세

	1950년대 (54년 기준)	1960년대 (64년)	1970년대 (74년)	1980년대 (82년)
일차에너지 공급구성비(%)				
원자력	—	—	0.1 ¹⁾	2.0
석유	—	9.6	54.9	58.0
무연탄		43.7	29.8	33.6
신탄(나무)		45.1	13.5	5.3
수력		1.6	1.8	1.1
발전 설비용량(kw)	254, 140 ²⁾	537, 485	4, 552, 940	10, 304, 063
총발전량(백만kwh)	899. 1 ²⁾	2, 699. 8	16, 835	43, 122
구성비(%) 수력	82.4 ²⁾	27.8	11.3	12.2
화력	17.6 ²⁾	64.2	88.4	81.8
일인당 전력소비량(kwh)	—	73	406	963
농어촌 전화율	—	12.0	40.6 ³⁾	
산업별 GNP 구성비(%)				
1차산업	51.1	45.6	25.0	19.2
제조업	5.3	17.6	29.1	34.2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43.6	36.5	45.9	46.6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1차 산업	—	61.9	48.2	32.0
2차 산업	—	8.8	17.8	21.9
3차 산업	—	29.3	34.0	46.1
중화학 공업 비율(%)	22	34 ⁴⁾	47 ⁵⁾	53 ⁶⁾

(주) 1) 1977년 자료, 2) 1951년 자료, 3) 1972년 자료, 4) 1966년 자료

5) 1976년 자료, 6) 1981년 자료

(자료) 상공부 『상공통계 연보』 각연도

에 82.4%, 17.6%이던 것이 82년에는 12.2%, 81.8%로 뒤바뀌었다. 석탄생산량도 1954년의 약 90만톤에서 81년에는 약 2천만톤으로 22배 가량 늘었다(표 1).

둘째, 공업화는 산업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특히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효과를 자아낸다. 산업별로 국민총생산에 기여한 비율을 보면, 54년에 1차, 2차 및 3차 산업의 구성비가 51.1%, 5.3%, 43.6%이던 것이 82년에는 각각 19.2%, 34.2%, 46.6%로, 1차 산업은 2.7배 줄어 든 반면, 제조업은 6.4배나 늘었다. 취업인구의 구성비에서도 64~82년 사이에 1차 산업이 절반으로 감소한데 비해 2차 산업은 2.5배, 3차 산업은 1.6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상대적 비중도 54년의

22%에서 81년 현재 53%까지 성장하였다.

세째, 공업화로 농업인구가 줄어 드는 대신에 농업 자체의 〈공업화〉, 즉 기계화가 진척을 보이게 되었다. 농가인구는 54년에 전체인구의 62.2%였으나, 계속 그 비율이 줄어들어서 64년에 55.6%, 74년에 38.8%, 그리고 82년에는 24.6% 밖에 되지 않는다. 농가인구 자체도 54년에 천 삼백만이던 것이 82년에는 9백 70만으로 절대수가 줄어 버렸다. 한편, 농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동력 경운기 같은 경우 61년에 전체 30대 밖에 없던 것이 82년에는 모두 42만대를 초과하게 되었고, 농업용 양수기도 같은 기간에 3천 7백여대에서 24만 6천대 가량으로 무려 65.8배나 늘었다.

네째, 인구의 도시화는 공업화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공업화가 진전되면 반드시 도시화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에 관해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

다섯째, 이와 같은 산업구조변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직업구조도 바뀌고 계층 또는 계급구조가 바뀌고 있다. 앞에서도 본 바대로 농림, 어업, 수렵 등 일차산업 종사자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 반면에, 다른 직업에서는 2배 내지 5배의 증가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적이 5배 가량, 사무적이 4배 이상 늘고 있었서 중간계층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변화는 이른바 조직사회화를 가져온다. 갖가지 공식적인 조직체의 수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개별 조직체의 규모

표 2. 농가인구의 변천과 농업기계화 추세

	1950년대 (54년)	1960년대 (64년)	1970년대 (74년)	1980년대 (82년)
농가인구(천 명)	13,170	15,553	13,459	9,688
전체인구에 대한 구성비(%)	62.2	55.6	38.8	24.6
호당 농가 인구(명)	5.89	6.35	5.65	4.85
호당 경지 면적(a)	87.3	88.6	94.0	109.2
농업용기계 보유수				
동력 경운기	30 ¹⁾	653	60,056	422,006
농업용 양수기	3,736 ¹⁾	15,350	62,863	245,794
농업용 트랙터	—	—	388	5,575
동력 이앙기	—	—	12	19,660
비료 소비량(t)	308,494 ¹⁾	364,145	836,659	617,205

(주) 1) 1961년 자료.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 연보』 각연도

표 3. 직업별 취업자 구성의 추이(%)

	1955	1965	1975	1982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2.8	2.8	3.5	5.5
사무직 종사자	2.4	4.0	6.3	9.7
판매 종사자	4.5	11.9	12.9	15.4
서비스직 종사자	2.1	6.5	7.2	10.0
농림업, 어업, 수렵, 유사직	79.5	58.5	46.1	31.8
생산종사자, 운전사, 단순노무직	8.7	16.3	24.1	27.7

(자료) 경제기획원『경제활동인구 연보』 각연도, 55년도자료는『한국통계연감』 1971.

표 4. 계급구조의 변화

	1960	1970	1975	1980
중상계급	0.9	1.3	1.2	1.8
신중간계급	6.6	14.2	15.7	17.7
구중간계급	13.0	14.8	14.5	20.0
근로계급	8.9	16.9	19.9	22.6
도시하류계급	6.6	8.0	7.5	5.9
독립자영농	40.0	28.0	28.2	23.2
농촌하류계급	24.0	16.7	12.9	8.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홍두승「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1983.

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 대표적인 보기로, 1956년 현재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5,761개였던 것이 82년에는 8만 1천 1백 36개로 14배의 증가를 보였고,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업체는 64년의 9천여개에서 82년에 4만 3천개 정도로 4.7배 늘어 났다. 근로자의 수도 56년에는 5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에 약 22만이 종사하였으나 82년에는 3백 38만이 되어 15배가 된 셈이다. 그 중 2백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이른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56년의 33.1%에서 82년에는 51.8%로 늘어 났다. 그리고 종사상 차위별로 본 취업자의 구성을 보아도, 자영업주나 가사종사자를 제외한 조직체 피고용자의 비율이 64년에 30.5%이었으나 82년에는 47.6%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사회 속의 공식적 조직체들은 그 성격이 관료조직화되어 간다는 게 또한 특징이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들이 한데 어울려 자아내는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사회는 규모가 크고 다원적인 대중사회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

표 5. 기업체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 추세

	1956년	1964년	1974년	1982년
총사업체수				
종업원 10인 이상	—	9,323	21,523	42,593
종업원 5인 이상	5,761	—	—	81,136
종사자수(5인 이상)	220,280	—	—	3,383,651
대기업체(200인 이상) 종사자 비율(%)	33.1	—	—	51.8
종사상 직위별 취업자 구성비(%)				
자영	—	37.0	33.9 ¹⁾	34.1
가사종사	—	32.5	25.5	18.3
조직체 피고용인	—	30.5	40.7	47.6

(주) 1) 1975년 자료

(자료) 노동부『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각연도, 경제기획원『경제 활동인 구 연보』

현대의 대중사회는 대상을 만드는 연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사회의 성격을, 감정의 복합체를 촉발시키는 생산품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풍요사회의 성격을, 의사소통의 상징과 관련해서는 과학사회의 성격을, 그리고 규범과 조직원리면에서는 조직사회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조직사회화의 추세가 자아내는 특성이다. 에너지, 자본, 노동력, 생산, 유통, 소비의 전분야에 걸쳐 집중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케 하는 표준화 내지 규격화가 따라 일어나며, 이런 변화들은 모든 활동과 조직체의 대형화, 극대화를 가져온다. 게다가 시간차원에서는 일이나 휴식을 같은 시간에 하는 동시화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로 말미암아,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은 조직체와 기술의 소산과 대중 문화에 예속되고 비인간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각한 벼성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한 세대가 겪은 변동은 이런 점에서 산업사회화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할 만하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일반론이 제시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전통적 요소의 지속적 잔존과 우리사회 특유의 선택적 적응의 결과로 인한 특수한 변동들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화라는 변동을 한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물질사회화〉

적어도 지난 한 세대, 특히 근자의 20년여 사이에 우리사회에서 거시적으

로나 조직원리 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산업사회화로 규정지운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변질, 인간의 가치나 규범 및 의식이라는 내면적인 경험에서의 변화 등 질적인 변동은 우리는 「물질사회화」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비교적 생소한 개념에 합의하기 까지 공동연구자들은 「세속 사회화」, 「이익사회화」(게젤샤프트화를 뜻하여), 「개인주의화」 등의 말들을 놓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결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번쩍 뜨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현상은 바로 물질적인 삶이 전에 비해 풍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상가격으로 보아 1961년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82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82년에는 1천 6백 7달러에 이르렀다. 1975년 불변가격에 의하면, 1954년에 2백 20달러였고 82년에는 8백 15달러에 해당한다. 어쨌든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효과는 우리의 의식주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어도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종류사회 이상의 소비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잘 살아 보자」는 소망이 이들에게는 이루어진 셈이다. 이른바 물질적인 의미의 「삶의 質」의 향상을 지목하는 갖가지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살펴 보아도 생활유형의 변화는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이제 분야별로 제시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을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만 소개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1955년 출생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은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고, 1960년 전체인구의 기대수명이 52.6세(남자 51.1, 여자 53.7세)였다. 그것이 70년에는 63.2세(59.8, 66.7세)가 되었고, 80년도에는 65.9세(62.7, 69.1세)로 경충 뛰었다. 확실히 살기 좋아진 증좌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비공산권 선진국 19개의 75세 보다는 아직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인 영아사망율이 우리와 경제형편이 비슷한 대만의 9.1에 비하면 아주 불리한 35.0(1982) 이지만, 1950년대의 62.4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 밖에 갖가지 복지 및 삶의 질의 지표를 보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놓칠 수가 없다. 따라서 생활양식도 바뀌어서 엔겔계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갖가지 문화생활이나 소비생활의 폭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표 6. 복지지표와 삶의 질의 변화 추세

	1954	1964	1974	1982
영아 사망률(천명당)	—	64.1	41.0	35.0
의료기관수	2,565	—	11,086	12,807
의사수	7,897	12,768	18,460	28,365
의사 1인당 인구수	2,682	2,192	1,879	1,387
병상수	8,894 ¹⁾	11,413 ²⁾	19,062	44,976
병상당 인구수	2,897 ¹⁾	2,497	1,820	875
1인당 1일 평균 열량섭취(cal)	—	2,041	2,371	2,588
1인당 1일 평균 단백질섭취(g)	—	54.7	69.4	78.3
1인당 육류 소비량				
쇠고기(g/日)	—	3.0	4.1	7.4
돼지고기(g/日)	—	6.0	7.5	16.5
달걀(개/年)	—	34	80	115
엔겔계수(%)				
도시	—	47.9	43.3	34.0
농촌	—	59.3	48.4	33.3
10세 아동 평균키(cm)				
남자	—	127.2 ⁴⁾	130.9	135.7
여자	—	126.0 ⁴⁾	130.0	136.1
10세 아동 평균 체중(kg)				
남자	—	25.5 ⁴⁾	27.5	30.0
여자	—	25.0 ⁴⁾	27.1	29.8
10세 아동 평균 흥위(cm)				
남자	—	62.4 ⁴⁾	64.4	65.3
여자	—	62.3 ⁴⁾	63.3	64.2
맥주소비량(kl)	30,820 ³⁾	42,177 ²⁾	160,869	599,202
청량음료 소비량(kl)	—	12,743 ²⁾	58,517	387,197
도시가구교양오락비지 출비율%	—	0.5	1.2	3.5
농촌가구교양오락비지 출비율%	—	0.5	1.4	1.8
피아노 생산실적(대)	—	1,737 ²⁾	6,988	78,438 ⁵⁾
도서 발행 종류수	1,558	2,750	7,018	17,151 ⁶⁾
도서 발행 부수	—	5,303,277 ⁷⁾	13,651,124	60,063,952 ⁶⁾

(주) 1). 1961년 자료, 2) 1965년, 3) 단위 石, 4) 1962년, 5) 1981년

6) 1979년, 7) 1968년

(자료) 각부처 통계연감 참조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성의 변화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1960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5.7명이었던 것이 1981년에는 4.5인으로 줄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60년에 1,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 71.5%이던 것이 80년에는 77.9%로는 데 반해, 3,4세대 가족의 비율은 그 사이 28.5%

에서 17.2%로 대폭 줄었다. 흔히 이를 핵가족화라 하거니와 엄격히 말해서 부부중심 가족의 우세 현상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량적 지표들로 추적할 수 있는 변화는 그 이면에 한층 더 뿐만 아니라 깊고 흔적이 큰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 있는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그러하듯이, 우리사회에도 소비지향적인 생활양식이 만연하여 돈의 가치가 지극히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여기에 편승하여 물질충상의 사조가 드높아질 뿐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수준의 끊임없는 상승이 자극받고 있다. 특히 교통통신,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경험의 폭이 갑작스레 넓어지게 됨으로써, 욕구의 확대와 기대·열망수준의 상향조정이 계속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상승하는 욕구와 맞부딪쳐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는가 하면, 목표달성을 위한 편법주의적 수단의 채택이라는 비뚤어진 가치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편, 생활의 과학주의적 세속적 합리화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산과 수단적·기능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교환사회」의 가치를 심고 있다. 특히 관료조직화되는 사회조직원리 속에서 그려잖아도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마냥 소외되고 원자화되는 사회 속에서, 조직화가 또한 강요하는 합리성이 우세하여 인정, 친밀감, 어수룩함, 염치, 겸양같은 미덕은 고객관계의 계산, 자기중심적 이해관심에 입각한 교환의 냉혹한 게젤샤프트적 가치에 의하여 빛을 잃고 만다.

이러한 가치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적, 구조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화, 원자화되어 가는 「조직인」으로 변신하는 개인은 가족과 혈연의 전통적 통제의 손아귀에 의해서 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고독한 군중」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따라서 모종의 원초 집단에 대한 향수가 짙어집으로써 가족 성원 간에 안겨 주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갖가지 원초적 성격을 띤 이차집단 혹은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를 희구하게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관료조직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원초적 관계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긴장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 구조적인 긴장은 주로 비대하는 근로계급이 산업민주주의와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게 되고, 팽창하는 중간계급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더 많은 결정행사에의 참여권과 부의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는 대기업과 지배상층계급에 의한 부와 권력의 집중화와 충돌하는 갈등과 긴장의 소지를 안고 있는 요소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물질사회화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물질적 삶의 풍요를 가져 오고는 있지만, 가치의식, 욕구체계, 인간관계,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에 왜곡과 긴장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의 공업화, 경제성장 자체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마땅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성격의 왜곡과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더 근본적인 쟁점을 안고 있으므로 더욱 더 예민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12대 동력 선정기준

무엇들이 과연 그와 같은 변동을 우리사회에다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 변화의 동력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변동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변화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일은 그것을 설명하는 일에다 비기면 아무 것도 아닌 만큼, 변동의 요인이나 동력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변동의 몇 가지 주요인을 확인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어떤 기제(메커니즘)를 타고 특정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밝혀 내기란 실로 어렵다.

인과적 설명은 우선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의 원인이고 결과임을 분명히 지적할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사회현상에 있어서는 한 가지 요인이 많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며, 한 가지 결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그 일이 더욱 힘들게 된다. 또한 사회변동의 설명에서 그 동력이라 할 때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와 행위가 주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동들과 이미 자리잡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 문화적 지향, 조직원리 같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능가하는 세력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다. 이런 쟁점은 사회변동 이론에서 미해결의 것으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변화의 동력이라 함은 변동에 작용한 사회적 세력을 일컫거나와 그 세력이란 인간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다

만 그 동력의 작용 자체의 성격에 관해서는, 주로 어떤 변동을 일으키고, 끌기도 하며 밀기도 하는 추진세력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사회의 변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을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되돌아 가기도 한다. 어떤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 곧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의 동력 내지 동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변화를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끌거나 밀어 주는 힘만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며, 그에 저항하기도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긍정적인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반대세력으로서 변동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궤도수정에 기여하게도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변화와 함께 스스로 변하면서 다른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어떤 동력의 작용 내지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충격의 범위, 강도(强度), 지속성, 가시성 또는 이면성 등의 기준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작업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상의 기준에서 두드러진 요인들을 찾되, 다음의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추가하였다. 먼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대개 중요하기 때문이겠으나, 그래도 당연시해 버릴 것이 아니라 두 번 더 성찰하여 선정한다. 다음, 가시적인 영향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동력도 가려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물러나 버린 요인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사회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큰 충격을 준 요인이나 세력들로서 다분과학문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을 변화의 동력으로 선정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30년 내지 한 세대의 변화라고 해서 그 동력도 그 시간적 틀 속에 한정시킬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한 세기가 그야말로 격동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단절의 역사를 가진 경우는 더욱 그 배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를 시작하기까지의 전통적 요소의 잔존, 일본식 민족화의 충격, 해방과 분단과 전쟁에 이어지는 민족적 비극의 상처, 4.19와 5.16, 10.26, 5.17에서 드러난 정변의 소용돌이 같은 것이 반드시 논의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좀 더 즉각적인 효과에다 초점을 두기도 하고, 위에서 지적한 역사적 배경은 하나의 배경으로 두되,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히 언급하기로 하였다. 더구나, 우리가 규정

한 산업사회화, 물질사회화라는 변화는 특히 제한된 시간적 차원에서 갑자기 일어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변화의 동력을 선정함에 있어서 흔히 하는대로 외적 요인, 내적요인, 혹은 외생적, 내생적 동력으로 구분하는 접근을 취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각 동력에 따라 흡수하는 길을 택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외세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계층화된 세계체계의 위계서열 속의 한국의 위치를 그 시기마다 확인하고, 강대국이나 선진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국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변화의 동인으로서는 국제적 문화접변의 효과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민족에 의한 주체적 반응과 적응과 선택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공업화를 시작하게 된 배경적 요인으로서 염두에 둘 것은, 첫째 당시의 한국이 세계체계 속에서 차지한 자리와 대외관계의 성격 때문에 스스로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분단의 여전 아래, 남한의 존립을 지속코자 하는 필요가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세째, 정부 특히 5.16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경제성장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네째, 국민 모두가 지난 수세기에 걸친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가 팽대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恨」이라는 특이한 개념으로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엄격하게는 일종의 生存의 필요라고도 할 수 있는 동인이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적어도 60년대 초부터는 많은 변화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련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보기이지만,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에 각계의 모든 기관단체는 계획 또는 기획활동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간의 적극적 개입 내지 역사 창조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게 옳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다. 여기에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역사와 구조적 흐름의 힘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세대에 걸친 한국사회의 변동에 작용한 동력을 열거하고 토론을 통해 간추려 얻은 것이 12 가지이다. 여기에는 인간적 요소로 관료와 軍, 재벌, 유학생 및 소외계층의 네 가지, 다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내적, 외적 세력으로서 안보와 국제세력, 교육열, 과학기술, 교통통신

혁명, 도시의 마력,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행복의 추구를 택하였다. 마지막 두 가지, 사회비판세력과 종교는 엄밀하게 따져서 변화의 동력으로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그보다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빠뜨리기 어려 우리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임을 인정하여 추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동력들은 모두가 개별적인 요인으로 따로 따로 작용한 게 아니고,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을 겪으면서 역동적으로 변화에 작용하는 것들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론적인 틀이 정립되어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이 요소를 배경에 깔고 각기 요인을 검토하겠다. 이번에 시도한 연구가 여러 모든 실무적인 제약 때문에 기대하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할 줄 알지만, 이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누군가는 한 번 취급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차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작업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더 본격적인 자료집성과 정리, 이론적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몫을 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